

‘공정 경쟁, 유통구조 개혁, 서민대출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노조 자녀 우선 채용권 의혹’ 지적
노동자 측 과도한 주장 자제 당부

OECD比 식료품 물가 약 50% 높아
양극화·불평등 심화… 대책 필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
“너무 잔인… 근본적인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들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햇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 게 더 비싼 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걸”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일 텐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는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란청산·3대개혁·李 정부 성장정책 지원”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 중 ‘내란 26번·협치 0번’ 언급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가짜뉴스 추방 AI, K-콘텐츠 등 지원체계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모두 26번 얘기했지만 ‘협치’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성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위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



◆“개혁은 타이밍… 검찰청 폐지”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참대추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ABCDEF 산업 육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

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 AI 기술개발을 돕겠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두고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태홍 기자 pth728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LH 부채부담 키우고 민간시장 위축 우려”

野 9·7 부동산 대책 긴급토론회

단기적 처방·강남3구 공급대책 전무
수요 억제책 중심 실패정책 연속 우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감동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안전화대응TF(테스크포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같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

되려면 5~10년인데,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단기적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급책도 문제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LH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 제도 개혁이 보이지 않고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하는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태홍 기자